

건설동향브리핑

제514호 (2015. 6. 8)

■ 정책 · 이슈

- 입찰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영향 분석
- 북한 인프라 건설의 과제

■ 경영 · 정보

-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체계적 진단부터 시작

■ 경제 동향

- 5월 CBSI, 전월비 3.2p 상승한 94.6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진단과 처방이 정확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입찰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영향 분석¹⁾

- 건설사 재무구조 악화, 해외공사 수주 제약 등 부작용 커 -

■ 공공공사 입찰담합에 따른 제재 현황

- 2014년에 적발된 공공공사 입찰담합 건수는 18건이며, 2015년 현재 5건이 적발되었음. 이는 연평균 2~3건 정도였던 예년 수준보다 대폭 증가한 것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형 공공공사 입찰담합 적발 건수가 각각 3건, 4건, 2건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2014년에 적발된 18건은 이례적인 수준으로 판단됨.
- 2014년 적발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건설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8,434억원이고 업체마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국내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확정되거나 예정된 상황임.
 - 입찰담합 제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확정 단계에 있는 4대강 1차 사업 등을 포함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약 1조 800억원에 달함.
-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 제재를 받은 대부분의 건설기업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제재와 이미 확정된 제재를 포함할 경우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의 건설기업들이 중복적으로 입찰담합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최장 기간 동안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임.
 - 최근 1년 사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집중 부과됨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동시에 제재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됨.

■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른 건설기업에의 영향

- 상당 기간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건설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과징금이 실제로 부과되면 다수 업체들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말 기준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59개사의 총 영업이익은 561억원, 총 당기순이익은 -4조 936억원임. 2014년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 8,000여억원은 2013년 영업이익

1) 본고는 지난 5월 2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국회 합진규 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2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임. 본고는 1회차임.

의 14배 수준임.

- 이러한 상황에서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로 모든 공공공사에 있어 최장 2년 간 입찰참가
가 불가능할 경우 기업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
- 해외매출이 없거나 비중이 낮은 중견건설기업들의 경우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민간 주택경기가 악화된 상태에서 공공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영에 심
각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건설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주요 공공공사 추진에 있어 차질을 빚게 할 가능성이 높
음. 특히, 입찰담합 제재 시기가 집중됨에 따라 2015년 하반기에서 2018년 상반기까지
동시에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입찰담합에 따른 제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국가 등에서 발주하는 주요 대형 국책
건설사업 발주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 실제로 2014년에 발주된 주요 대형 공공공사에 있어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등 입찰
및 계약방식이 변경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 공공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건설기업들이 입찰 과정에서 원천적
으로 배제되는 것은 국민 및 국가의 경제적 후생의 손실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음.
-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수주 경쟁은 실질적으로 국가 간의 경쟁으로 한국 건설기업들의
입찰담합에 따른 제재는 해외건설 수주에 있어 입찰에 참여하는 타 국가들에 의해 입
찰 참여에 대한 결격사유로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실제로 최근 있었던 UAE 원전사업 관련, UAE원자력공사에서 4대강 입찰담합에 대한
사실 여부와 확정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해 오는 등 영향이 있는 상황임.
-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인하여 대형 및 중견 건설기업의 전체적인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면 하도급, 자재·장비업체 등 전체 건설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함.
- 또한, 현장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됨에 따라 최근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는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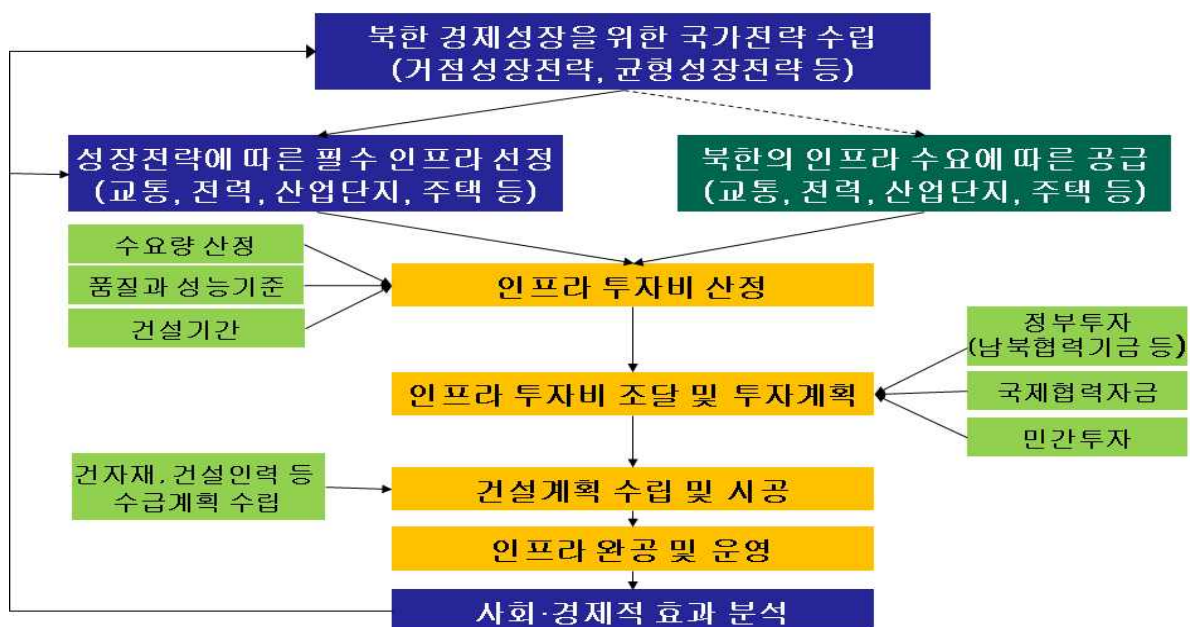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북한 인프라 건설의 과제

- 체계적 종합개발계획 수립 후 남북 정부의 긴밀한 공조 속에 추진해야 -

■ 북한 경제성장 수준에 맞춰 단계별로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

- 북한 경제는 현재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있지 못한 상태임. 또한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
- 지난 196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정책을 참조하여 북한 인프라 건설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1단계 : 빈곤 극복을 위한 기초 인프라 공급(도로·철도·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복구)
 - 2단계 :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공급(핵심 인프라 건설, 산업단지 건설)
 - 3단계 : 경제성장 극대화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에너지, 전자, 섬유 등)
- 북한의 인프라 공급계획은 우선 북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포함. 다음으로 거점성장전략, 균형성장전략 등 경제성장 전략에 따른 필수 인프라를 선정하고, 이들 인프라의 공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이후 인프라 투자비 산정, 인프라 투자비 조달 및 투자계획 수립 후 각 인프라별 건설 계획 수립 및 시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 북한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시 건설산업 차원의 추진 과제

- 북한 인프라 종합개발계획 수립
 - 남·북한 정부가 협력하여 북한 인프라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어떤 방식으로 건설해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
 -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유형별 특성에 따른 투자재원의 조달(재정, 민자 등) 등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해야 함.
- 공사발주의 투명화
 - 남·북한 정부가 협력하여 인프라 개발사업의 발주계획(재정, 민자 등)을 국내외 투자자 및 건설업계에 투명하게 전달해야 함.
 -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발주기관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별 업체 단위로 진출할 경우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투명한 정보로 합리적인 경쟁을 촉진시켜 북한 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인프라 건설활동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인프라 건설사업은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수반,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
 - 가칭 ‘인프라 개발사업 통합관리위원회’ 설치 검토, 경제특구, 교통인프라 등 개별 건설사업 추진시 개별화된 관리주체(주무관청)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거나, 개별 관리 주체 또는 발주처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 북한 건설자재산업 육성 및 건설기능인력 훈련센터 설립 필요
 - 북한 인프라 건설활동 추진시 대규모 건설기능인력 확보가 필요, 특히 숙련공 확보를 위해 북한 건설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
 - 남·북한 정부 및 건설업계가 공동으로 북한 건설기능인력 훈련센터 설립을 검토, 훈련된 건설인력은 북한뿐 아니라 우리 건설기업이 진출한 해외건설 현장 또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
 -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시 건설자재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북한 내 건설자재산업 육성책 마련 필요

박용석(연구위원 · yspark@cerik.re.kr)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체계적 진단부터 시작

- 리스크지수(IPRI)의 변동량 추적 및 분석 필요¹⁾ -

■ 객관적 사업 실적 현황 분석, 리스크관리 역량 진단의 출발점

- 2015년 들어 해외건설사업 수주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72%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실정임²⁾. 특히 중동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28% 수준, 산업설비와 토목 부문은 각각 55%, 53% 수준으로 수주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해외사업의 수주 규모 감소와 일부 사업에서의 지속적인 손실 발생은 국내 건설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위협하고 있음.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수익성 하락 예방대책과 손실에 노출된 잠재리스크 규모의 증가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
 - 수주 실적은 기업의 수주 역량과 진출국의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만, 사업 수행 실적은 프로젝트관리, 또는 리스크관리와 같은 기업 내부적 역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
 - 수주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수익성 제고와 손실 최소화를 위한 실적 기반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모니터링 기능이 절실함.

■ IPRI 추이분석 통해 중점관리사업부터 신속한 대응 필요

- 최근 소개된 해외건설사업 리스크지수(IPRI, International Project Risk Index)는 단위 사업의 진행률 실적을 기반으로 잠재리스크 규모를 계량화한 지수로서, 사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 각각의 사업이 수반하고 있는 잠재리스크 규모를 설명함.
 - IPRI 값이 감소하는 것은 표준 계획에 따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IPRI 값이 증가하는 것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공종 · 권역 · 규모 · 기업별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평균 IPRI 값을 살펴 보면 사업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응과 잠재리스크에 대한 통제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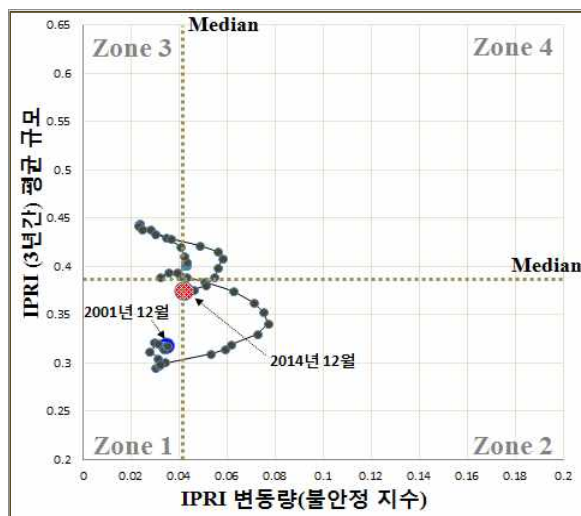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외건설사업 리스크지수(IPRI) 개발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2)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해외건설협회(www.kor.icak.or.kr)

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IPRI 변동량이 크면 리스크 대응 및 통제 역량의 안정화가 부족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IPRI 변동량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됨.

- IPRI 규모와 변동량을 추적 및 분석하여 사업에 대해 사전적 진단이 가능하여 집중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도출하고 기업 차원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함.
 - 2001년에 비해 2014년의 IPRI 규모와 변동량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수주 규모와 난이도가 증가하면서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통제 역량 향상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리스크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함을 시사함.

<산업 차원의 IPRI 추적 결과>



■ **공종 · 권역 · 규모별 IPRI 추이 분석,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실효성 기대**

- 산업 차원의 IPRI 추적과 분석을 공종 · 권역 · 규모 · 기업별로 적용할 경우 국내 건설 기업들이 수행하는 단위 사업의 잠재리스크 규모를 추정할 수 있고, IPRI의 크기에 영향도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 활동의 적시성 확보가 가능함.
- 궁극적으로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어 향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수익성 제고와 손실의 제로화 목표 달성을 지원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유위성(연구위원 · wsyoo@cerik.re.kr) / 김우영(연구위원 · beladomo@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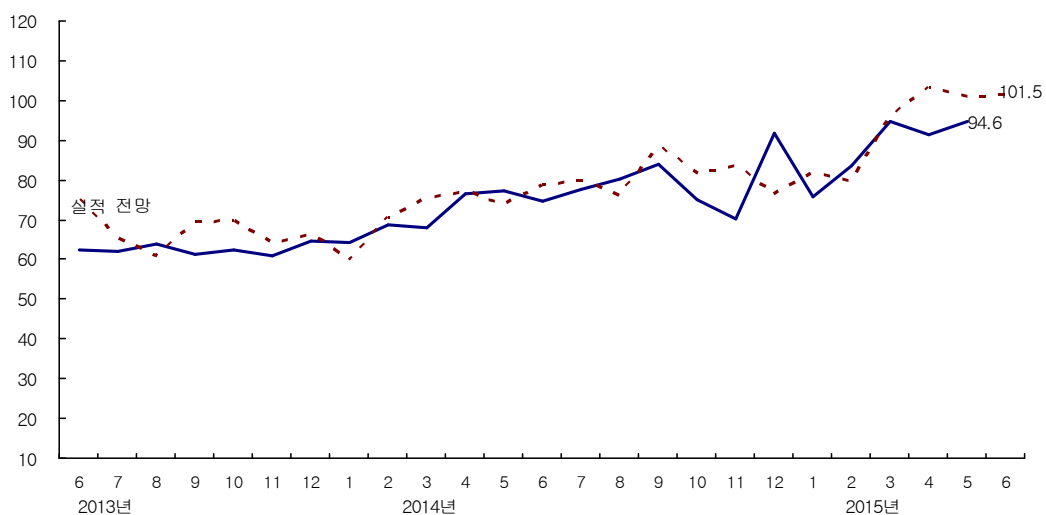
5월 CBSI, 전월비 3.2p 상승한 94.6

- 익월 전망치, 3개월 연속 기준선(100.0) 상회 -

■ 5년 6개월 내 최고치 기록했던 지난 3월 수치에 다시 근접

- 2015년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¹⁾는 전월비 3.2p 상승한 94.6을 기록함.
 - CBSI는 지난 2월 이후 주택경기 회복,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상승해 (11.4p 상승) 3월에는 5년 6개월 내 최고치인 94.9를 기록. 그러나, 4월 들어 그동안 지수 상승에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가 작용해 전월비 3.5p 하락함.
 - 5월 들어 다시 전월비 3.2p 상승해 지난 3월 수치에 다시 근접함.
 - 이는 5월에도 주택경기가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신규 공사수주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실제로 5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가 기준선(100.0)을 상회한 104.8을 기록해 신규 공사수주가 전월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더 많아 전체 CBSI의 상승을 뒷받침함.
 - 종합적으로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침체 상황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CBSI 수치가 아직 기준선(100.0)에는 못 미쳐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는 없음.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 상승, 중견기업 지수 하락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가 상승한 반면, 그 동안 상승폭이 컸던 중견기업 지수는 비교적 크게 하락함.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비 7.1p 상승한 115.4를 기록하여 6개월 연속 기준선을 상회하면서 지난 3월 수준을 회복하였음. 지수가 6개월 연속 기준선을 상회한 것은 지난 2005년 2~7월의 6개월 연속 상승 이후 처음으로, 대형기업의 체감경기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비 10.4p 하락하여 84.2를 기록했음. 3월에 103.1로 기준선을 상회한 이후 2개월 연속 비교적 크게 하락하여(18.9p 하락), 중견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14.1p 상승한 82.0을 기록했음. 3개월 연속 상승으로 이 기간 동안 28.3p 상승했으며, 82.0은 2010년 8월에 84.5를 기록한 이후 4년 9개월 만의 최고치임. 단, 지수 자체는 여전히 대형 및 중견기업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함.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77.7	80.2	83.9	74.9	70.4	91.7	75.8	83.5	94.9	91.4	94.6	101.2	101.5	
규모별	대형	100.0	92.3	108.3	92.3	92.3	100.0	100.0	115.4	108.3	115.4	125.0	123.1	
	중견	75.8	83.3	80.0	78.8	70.0	97.0	71.9	90.6	103.1	94.6	84.2	94.6	89.5
	중소	53.8	62.5	59.6	50.0	45.1	76.0	51.9	56.0	61.5	67.9	82.0	80.8	89.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6월 전망치, 5월 실적치 대비 6.9p 높은 101.5 기록

- 2015년 6월 CBSI 전망치는 5월 실적치 대비 6.9p 높은 101.5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높은 것은 건설기업들이 6월에는 건설경기가 5월보다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6월 전망치도 기준선을 상회하여 전망치는 3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었음. 다수의 건설기업이 향후 건설경기 회복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하지만 기업 규모별로는 다소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음. 중견기업의 전망치는 지난 5월의 94.6에서 6월에는 89.5로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5월의 80.8에서 6월에는 89.8로 상승해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 높게 나타남.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6. 2	국토교통부	• 기술정책과 주최, 'CM 제도개선 TF 실무진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김우영 실장 참여
6. 3	국회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 '일용 및 노령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대책 세미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 위원 주제 발표자로 참여 - 주제 : 건설 일용근로자 생활안정 현황과 대책
6. 4	김태원 국회의원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정책 방향 토론회'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실장 참여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시장 정상화 관련 논의

■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이슈포커스	건설산업 신성장동력으로서 물산업의 전망과 진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으로 물산업이 21세기의 '블루골드'로 부상하고 우리 정부 역시 2009년 이후 물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제기된 '물산업은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었음. - 우선 물산업의 성장성과 우리 기업의 수익 창출 가능성 분석을 통해 건설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물산업을 제시하고, 이어서 국내 건설기업이 해외 물시장에 진출하는 전략 방안을 모색함. • 물산업의 성장성은 특히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경제 성장에 따른 인구 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자원의 불안정성 증가 등에 의해 확보 - 댐, 담수화 설비 등 수자원 확보 설비부터 정수 설비, 상·하수도망, 하수처리장, 재이용 설비 등 물산업 전반의 설비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물산업 전반에 걸쳐 체계적 시각을 보유할 수 있어, 건설업은 성장세가 확보된 물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할 근거를 보유 - 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제조 부문과 기획 및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부문의 국제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업에 고유한 시공 참여만으로는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운영 사업에도 참여해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건설기업들은 국내외에서 풍부한 물산업 설비의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 경험이 집중된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물시장 성장률 예측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CERIK 도서회원」 가입 안내

- 연구원은 건설산업 관련 보고서 및 CERIK저널, 건설동향브리핑 등 연구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관계자 및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음.
- 도서 회원에게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정책 연구 자료 및 각종 연구 발간물, 정기 간행물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수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문의 : 기업지원팀(Tel. 02-3441-0848)

진단과 처방이 정확해야

최근 건설산업 생산체계와 관련한 진단과 처방에 있어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칸막이식 업역 규제에 안주하여 입찰용 회사나 페이퍼컴퍼니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종별 영업 범위를 폐지하고, 발주자가 생산체계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발주자의 역량이 미흡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 입찰제도 규제 하에서 업역이나 영업범위 제한만 완화할 경우, 부적격자의 낙찰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입찰용회사나 페이퍼컴퍼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입찰 제도를 혁신하거나, 건설업 등록이나 사후관리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현실 진단도 미흡하다. 현행 법령을 보면 하도급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직접시공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물량의 상당 부분이 십장(什長)이나 기계장비업자에게 재하도급된다. 즉, 전문건설업체의 위상은 중간관리자에 가까우며 이는 종합과 전문간 업역 분쟁이 발생하는 근원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처방은 직접시공이 가능한 주체를 대상으로 전문건설업시장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원도급자가 노무하도급을 담당하는 십장이나 장비업자에게 직접 하도급하는 방안을 장려해야 한다.

하도급보호 정책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의 건설공사도 하도급 생산이 일반적이지만 별다른 잡음이 없다. 또 제도적인 보호도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도급업체의 기업 규모가 크고 협상력이 있는 경우로서 독일이나 호주가 대표적이다. 두번째는 원도급 업체의 하부에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수직 계열화한 구조인데,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주도로 건설시장이 성장해 온 특성이 있다. 따라서 원하도급 관계도 장기 협력관계나 수직계열화를 촉진하는 것이 정책 흐름에 부합된다. 일례로 공사 입찰에서 원하도급 간 파트너십을 평가하거나 경쟁력 있는 하도급 시공체계를 구축했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원하도급 간 불공정을 개선한다는 취지하에 면허 체계나 발주, 생산체계를 왜곡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하도급 보호 방안으로서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하거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 흔히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일괄책임자가 사라지고 계약이행이나 하자관련 분쟁을 늘릴 수밖에 없다. 결국 원하도급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발주자의 감시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장기적으로는 실비정산(cost-plus-fee) 방식이나 프로젝트파트너링 방식을 검토해 볼 만하다. <아시아경제, 2015. 6. 1>

최민수(건설정책연구실장 • mschoi@cerik.re.kr)